

석유화학단지,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지역 특별 지진대책 수립 긴급 촉구결의안

의안 번호	1268
----------	------

발의연월일 : 2016. 9. .

발 의 자 : 이효상 의원 외 8명

1. 주 문

-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규모의 지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현재 진원지인 경주는 물론이고 인근지역인 울산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확산으로 주민들은 불안 해 하고 있으나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울산시는 그에 대한 명쾌한 대책이 없는 실정임
- 인근지역이긴 하나 울산은 국가산업단지인 석유화학단지와 국가원자력의 과반이상이 있는 곳으로써 만에 하나 대형 지진이 발생할 시 일어날 혼란은 극심할 것이 확실한바
- 이러한 공황사태를 예방하고자 미리 비상대비 매뉴얼과 행동요령을 명시하여 지속적 연습을 통한 재난 대비를 함으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하고자 울산시에 긴급하게 특별 지진대책 수립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코자 함.

2. 제안이유

-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 규모의 지진과 잇따른 여진으로 인해 울산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지진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으나, 정작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울산시는 대처능력 부족으로 행정의 불신과 더불어 시민대피 행동은 사실상 자의적 판단에 맡겨둔 현실임.
- 울산은 국가산업단지인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와 원전에 둘러싸인 특수한 지역으로, 만에 하나 일어날 대형 지진에 대비하여 특별 지진대책 수립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울산시가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연대해 긴급 특별 지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3. 결 의 문 : 따로 붙임

제189회 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9. 27(화) 11:00

**석유화학단지,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지역 특별 지진대책 수립 긴급 촉구결의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석유화학단지,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지역 특별 지진대책 수립 긴급 촉구결의안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규모의 지진과 잇따른 여진으로 인해 현재 울산과 인근도시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지진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다.

심지어 대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괴담까지 떠돌고 있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안전처는 대처능력 부족으로 행정의 불신과 더불어 시민대피 요령은 사실상 자의적 판단에 맡겨둔 현실이다.

특히 울산은 국가산업단지인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와 국가원자력의 과반이상이 원전에 둘러싸인 특수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울산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특별 안전대책 매뉴얼을 만들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울산시민 상당수는 지진 불안감으로 인해 지하주차장의 차량을 지상으로 이동시켜 인근 도로변과 운동장 등에 주차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공동주택 등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마다 지진에 따른 주민대피요령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일례로 900세대 대규모 아파트의 주민대피 공지문에는 지진발생시 119로 문의하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주민들은 애꿎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전화가 불통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일본의 지진대피 요령 문건을 구해 다니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처럼 예견치 못한 재난발생시 도심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그 누가 안전을 장담할 수 있겠는가.

지난 부산시에서 실시한 2014년 고리 방사능 방재 연합 훈련에서는 정전으로 인한 에스컬레이트 가동 중지와 몰려든 시민들이 뒤엉켜 훈련이 중지되는 사

태가 빚어져 결국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지금 부산시는 지진전문가를 채용해 국민안전처와 기상청,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긴밀히 협의해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지진대피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양산단층대가 활성단층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놨지만 원전에 대한 불안감과 원전건립반대 여론을 의식해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울산시는 언제 만들어질지 모를 정부의 지진대비 매뉴얼에만 목을 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울산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원전 반경 30km 이내 울산시의 유아 및 초·중·고교생, 일반 시민 등 각 계층별 맞춤형 시설(운동장, 지하주차장)을 확충하고 단계별 훈련을 통해 유사시에 대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진 발생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석유화학단지 내 폭발사고와 이에 따른 안전 대피 및 시민행동 요령을 만들어 울산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지역 특성을 감안해 전문가와 협의해 지진발생에 따른 석유화학단지와 원전에 대한 총체적 안전 매뉴얼 제작을 촉구한다.

하나. 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의 폐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새롭게 건립되는 원전에 대한 정책을 폐기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한 명확한 정책 입장을 정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9월27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